

2027

항해사 운항사 소형선박조종사
수면비행선박조종사

해기사 공통 해사법규

엠북 해사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PDF 전자책
- ★ 4시간 20분 완성
- ★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★ 법, 시행령/시행규칙(일부) 종합

도서명 : 해기사 공통 해사법규

ISBN : 979-11-7393-355-4

발간일 : 2026-09-09

형식 : 전자책(PDF)

저자 : 김병연 교수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16,500원



해기사 공통 해사법규

[목차]

- 제1편 해사안전기본법(p3)
- 제2편 해상교통안전법(p16)
- 제3편 선박입출항법(p90)
- 제4편 해양환경관리법(p121~200)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된 내용

붉은색은 시행 예정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편 해사안전기본법

(이하 법)

[목차]

- 제1장 총칙
- 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등
- 제3장 해상교통관리시책 등
- 제4장 국제협력 및 해사안전산업 진흥

제5장 해양안전교육 및 문화 진흥

제6장 보칙

제7장 벌칙

[약어]

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

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, 특별자치도지사

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군의 구청장

중앙기관장은 (관계) 중앙행정기관의 장

제1장 총칙

1~6조

1. 목적

- 해사안전 정책/제도 기본 사항 규정
- 해양사고 방지, 원활한 교통 확보
- 국민 생명/신체, 재산 보호에 이바지

2. 기본이념

- 해양에서 선박 항행/운항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 생명/신체,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, 자자체의 책무임 확인
- 해양 이용, 보존 시책 수립시 해사안전 우선 고려
-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 도모

3. 정의

가. 해사안전관리

- 선원/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, 선박/화물 등 물적 요인, 해상교통체계/교통시설 등 환경적 요인, 국제협약/안전제도 등 제도적 요인을 종합적/체계적으로 관리해,
- 선박 운용 관련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생명/신체, 재산 안전 확보 위한 모든 활동

나. 선박

-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
- 수상항공기(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)와 수면비행선박(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해 수면 가까이 비행하는 선박) 포함

다. 해양시설

- 자원 탐사/개발, 해양과학조사, 선박 계류/수리/하역, 해상주거/관광/레저 등 목적으로 해저에 고착된 교량, 터널, 케이블, 인공섬, 시설물, 해상부유 구조물
- 단, 선박 제외

라. 해사안전산업

- 해양사고로부터 생명, 신체,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, 장비, 시설, 제품 등 개발, 생산, 유통, 관련 서비스 제공

마. 해상교통망

- 선박 운항상 안전 확보와 원활한 운항흐름을 위해 장관이 영해와 내수에 설정하는 각종 항로, 각종 수역 등 해양공간과 이에 설치되는 해양교통시설의 결합체

바. 해사 사이버안전

- 사이버공격에서 선박운항시스템을 보호해 선박운항시스템과 정보의 기밀성,

4. 국가 등의 책무

가. 국가, 지자체는

- 1) 다음 시책 수립/시행
 - 해사안전 확보, 해양에서 국민 생명/신체, 재산 보호
 -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해상교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도록 해양시설 관리, 해상교통망 구축/관리, 해상교통 신기술 개발/기반조성 지원,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
 - 해사안전 종사자 안전 확보, 복지 향상
- 2) 국민의 안전한 해양이용 촉진을 위해 해사안전 지식/정보 제공, 교육, 해사안전 문화 홍보 노력

나. 국가는

- 외국, 국제기구 등과 해사안전 기술협력, 정보교환, 공동 조사/연구 기구설치 등 효율적 국제협력 추진 노력
- 해사안전 산업 진흥, 국제화 지원

5. 국민 등의 책무

- 가) 모든 국민은 국가/지자체 수립/시행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에 적극 협력
- 나) 선박/해양시설 소유자는 국가의 시책에 협력해 자기가 소유/관리, 운영하는 선박/해양시설에서 해양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게 종사자 교육/훈련, 안전규정 준수

6. 다른 법률과의 관계

- 국가는 법의 목적/기본이념에 맞게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다른 법률 제정, 개정

제2장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의 수립 등

7~10조

1. 장관의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(이하 기본계획) 수립

가. 해사안전 증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 요

- 기본계획 중 항행환경개선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가능

나. 내용

1) 중요한 사항

- 정책 중장기 추진 **목표**, 기본방향

- **제도**/여건 개선

- **투자**/재원 조달

2) 기타 사항

- 정책 환경 변화/전망

- 선박/해양시설, 여객/승무원 안전 증진

- 수역 설정, 해상교통환경 조사, 사고 위해요소 개선

- 선박 항행보조시설, 장비, 정보통신체제 설치/운영

- 인력 양성/수급

- 지식 보급, 문화 증진

- 기술 연구/개발

- 산업 육성

- 국제협력

- 부문별/기관별/연차별 사업계획 추진/시행

- 장관 인정 사항

다. 기본계획 수립, 중요한 사항 변경시 관계 행정기관 장과 협의 요

라. 기본계획 수립/변경을 위해 중앙기관장, 시도지사, 시군구, 공공기관의 장, 해사안전 관련 기관/단체 장, 개인에 자료 제출, 의견 진술 등 협력 요청

-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

2. 해사안전시행계획(이하 시행계획)

가) 장관은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 매년 수립/시행 요

나) 장관은 수립지침을 작성해 중앙기관장, 시도지사, 시군구, 공공기관 장에 통보

- 통보 받은 자는 기관별 시행계획을 작성해 장관에 제출

3. 장관의 해사안전실태조사

가) 기본계획,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/시행을 위해 5년마다 조사하고, 결과를 기본계획, 시행계획에 반영 요

나)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, 법인, 단체, 시설의 장에 자료, 의견 요청 가능

- 요청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요

4.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/변경한 때

가) 중앙기관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,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

나) 공표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1. 장관의 **해상교통관리시책**

- 가)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해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 지도록 해상교통관리 시책 강구
- 나) 시책 이행을 위해 주기적으로 연안해역 등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, 결과 공표
- 다)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해 해상교통시설 설치/관리

2. 장관의 **선박 및 해양시설의 안전성 확보**

- 가)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의 구조/설비 및 시설 등 기술기준 개선, 지속적 발전 시책 마련
- 나) 선박의 교통상 장애 제거를 위해 해양시설 안전관리
- 다) 해상교통관리시책 수립/추진 및 이행, 선박의 안전성 및 해양시설 안전관리는 따로 법률(해상교통안전법)로 정함

3. 장관의 **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**

가. 다음 시책 수립/추진 요

-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
- 업무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/연수
- 업무종사자에 교육프로그램, 교재 개발/보급
- 신기술 접목 선박 등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
-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

나. 전문인력 양성기관

- 1) 해사안전관리 관련 대학, 연구소, 기관, 단체를 지정하고,
 - 교육/훈련 비용 전부/일부 지원 가능

2) 다음 경우 지정 취소 가능

- 거짓/부정 지정 받음
-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업무안함
-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

4. 장관의 **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등**

가. 다음 해양교통안전정보 통합 유지/관리 위해 구축/운영 가능

- 1) 해양사고, 사고 원인
- 2) 선박
 - 등록/운항기록, 위치/입출항, 점검/검사/인증심사, 운용 지도/감독, 행정처분
- 3) 선원
 - 면허/교육/훈련, 승하선
- 4) 선박/선원 공제, 해운업/수산업 경영 사업자, 항로/수로/항만 등 해양 공간, 해양시설, 항로표지 등 항행보조시설, 해양 기상, 해상교통환경, 항행안전 지원, 해상교통안전진단, 장관 인정 정보

나. 해양교통안전정보를 보유한 중앙기관장, 시도지사, 시군구, 공공기관 장, 해사안전 관련 기관/단체 장, 개인에 정보 제공 등 협력 요청 가능

-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함

다.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, 관련 기관/단체와 해양교통안전정보 공유 가능

5. 장관의 **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**